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세버스 위·수탁계약제도 도입 〉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29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 목 차

|                                                  |    |
|--------------------------------------------------|----|
|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제2211429호) .....                    | 1  |
| Ⅰ. 제안경위 .....                                    | 1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Ⅲ. 검토의견 .....                                    | 3  |
| 1. 전세버스 지입운행 양성화 필요성 .....                       | 3  |
| 2. 주요내용에 관한 검토 .....                             | 10 |
| 가. 위·수탁계약제도 도입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예외 허용 .....           | 10 |
| 나. 위·수탁계약제도 도입 .....                             | 12 |
| 다. 운송사업자의 위·수탁차주에 대한 준수사항 .....                  | 23 |
| 라.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에 현물출자<br>차량 포함 ..... | 25 |
| 마. 현물출자 차량 등에 대한 압류 금지 .....                     | 30 |
| 바. 과태료 .....                                     | 32 |

##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2211429)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종오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7. 10.
3. 회 부 일 : 2025. 7. 1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합친 수송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송하면서 대중교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상당수는 기사 소유 차량을 면허권을 가진 운수회사에 불법으로 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지입제로 인해 전세버스 기사(지입차주)는 자신의 명의로 차를 등록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매달 내야 하는 지입료와 노선비라는 명목의 권리금까지 부담하고 있음. 심지어 운수회사가 일방적으로 차량을 처분해도 지입차주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법 지입제의 경우 지입차주도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와 같이 지입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전세버스

기사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명의이용금지 규정 자체는 유지하되 지입제도에 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며,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3년 이상의 계약기간과 차주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여 차주 동의없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차주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근로환경을 향상시켜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 신설, 제14조제11항 신설, 제21조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신설, 제89조의4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전세버스 지입운행 양성화 필요성

##### 가. 검토의견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sup>1)</sup>)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속하는 업종임<sup>2)</sup>.

2024년 기준 전국 전세버스운송업체는 1,592개이며,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40,759대, 운수종사자는 40,592명임.

##### < 전세버스 일반현황 >

| 구 분       | 2021   | 2022   | 2023   | 2024   |
|-----------|--------|--------|--------|--------|
| 업체수(개)    | 1,634  | 1,619  | 1,600  | 1,592  |
| 등록대수(대)   | 41,167 | 40,777 | 40,824 | 40,759 |
| 운수종사자수(명) | 34,607 | 36,717 | 39,723 | 40,592 |

출처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자료 : 국토교통부

1)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 구분(법 제3조)       | 세부 업종(시행령 제3조)                            |
|-----------------|-------------------------------------------|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
|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업종으로서 현행 등록기준에 따르면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여야 함3).

그런데 전세버스운송사업은 현행법 제12조4)의 명의이용 금지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본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차량 구입비를 부담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송행위를 하는 이른바 “지입제”가 여전히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5).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시·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 1. 등록기준 대수

| 업 종         |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        |                     |
|-------------|-----------------|--------|---------------------|
|             | 특별시<br>및 광역시    | 시      | 군<br>(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10대 이상          | 10대 이상 | 10대 이상              |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전세버스 운영실태 조사(2024.6.26.~8.7.)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전체 응답 618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량 소유 형태에 대해 직영 차량이 75.9%, 지입 차량이 24.1%로 나타났고, 소속업체 전체 차량 중 지입차량 비율은 평균 25.4%로 조사

전세버스 지입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①운송사업자 측면에서 차량 구입 자본 부족, 직영운영의 어려움, 고정적인 지입료 수입, 관리비용 절감, ②운수종사자 측면에서 사업체 보증을 통한 차량 구입, 개인영업 가능, 회계·세무·노무관리 등 사업관리 부담 해소, ③이용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 등을 이유로 전세버스 지입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sup>6)</sup>.

이처럼 현행법상 전세버스 지입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관행화되어 있어 지입차주는 전세버스에 주어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sup>7)</sup>, 운수회사에 매달 지입료를 납부하며<sup>8)</sup>, 운수회사가 차주 동의 없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강제 매각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나<sup>9)</sup>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근절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전세버스 지입운행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와 같이 양성화하려는 것으로, 현

---

됨. [“전세버스 수급조절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2025]

6) “전세버스 시장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2021, p.58.

7) 전세버스 사업용 차량 구매 시 납부한 부가세(차량가액의 10%)는 매출 부가세 납부 시 매입 부가세로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으나, 구매 명의자(운수회사)와 실구매자(지입차주)가 달라 지입차주가 매입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8)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전세버스 운영실태 조사(2024.6.26.~8.7.)에 따른 운수종사자(전체 응답 618명) 대상 조사 결과, 지입 차량 운전자가 회사에 납부하는 지입료는 월 평균 419,953 원으로 나타남.

9) 한국교통연구원의 위 조사에 따른 운수종사자 대상 조사 결과, 지입운행으로 인한 피해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4.7%로 나타났고, 피해 내용으로는 **회사운영 비용(조합비, 4대 보험료, 유류비, 각종 세금 등)을 지입차주에게 부담시킴 47.3%, 사업자가 지입차량으로 담보대출을 받거나, 차량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유용함 35.2%,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할 경우 일거리를 주지 않음 35.2%**로 나타남.

행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지입차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세버스는 화물이 아닌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으로서, 안전 및 서비스에 관한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가 요구되나, 지입제는 기본적으로 운송사업의 경영 주체와 운행 주체가 상이한 구조로서 여객을 위한 운송 품질의 개선이나 안전 확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운송사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지입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sup>10)</sup>.

둘째, 전세버스 지입 운행이 여전히 관행화되어 있으나 수년 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 경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지입운행이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운수회사 및 운수종사자 모두 지입차주의 선호(상대적 고수입)보다 전세버스 회사의 선호(경영부담 완화)를 더 주된 이유로 보고 있음.

---

10) 한국교통연구원의 위 조사에 따른 운송사업체(전체응답 623개) 대상 조사 결과, 지입형태 운행으로 인한 사업체의 피해 유형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할 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아 회사 경영에 피해를 준 44.2%, 사업자가 지입차주에게 운행·배차, 안전 관련 개선 요구에 동참하지 않거나 개별행동으로 관리가 어려움 38.1%, 기타 17.7%로 나타남.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해 볼 때, 지입차주 보호를 위해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입제를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 전세버스 지입차량 비중 및 피해경험(운수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

| 구분   | 운수종사자 차량 소유 형태 |       | 운수종사자의 지입 운행으로 인한 피해 경험 |       |       |
|------|----------------|-------|-------------------------|-------|-------|
|      | 직영차량           | 지입차량  | 없다                      | 있다    | 잘모르겠다 |
| 2021 | 35.6%          | 64.4% | 42.4%                   | 40.3% | 15.1% |
| 2024 | 75.9%          | 24.1% | 66.2%                   | 14.7% | 19.1% |

자료 : “전세버스 시장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2021.

“전세버스 수급조절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2025.

#### < 전세버스 지입형태가 유지되는 주된 이유(2024 설문조사) >

| 설문대상  | 전세버스 회사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입차량을 선호함 | 전세버스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 지입차량의 운전자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아 운전자가 선호함 | 기타   |
|-------|------------------------------------|-----------------------|---------------------------------|------|
| 운수회사  | 46.9%                              | 29.5%                 | 16.9%                           | 6.6% |
| 운수종사자 | 34.8%                              | 36.1%                 | 25.4%                           | 3.7% |

자료 : “전세버스 수급조절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2025

셋째,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코로나사태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sup>11)</sup>, 여객운수업 중 전세버스가 대형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으며<sup>12)</sup>, 과거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사고 1건당 사상자수는 전세버스가 매년 가장 높아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심각도가 다른 여객운수업 업

11) 전세버스 교통사고 발생 현황: 2019년 1,272건 → 2023년 1,361건(자료 : 국토교통부)

12) 2023년 기준 여객운수업 중 대형교통사고 비율은 전세버스 1.18%, 시외·고속버스 1.02%, 시내버스 0.08%로 전세버스가 가장 높음. [“전세버스 수급조절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2025]

중 대비 큰 것으로 분석<sup>13)</sup>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버스 지입제를 양성화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 약화로 교통안전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최근 전세버스의 운행 수요가 관광 등 일반 전세보다 통학·통근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세버스가 대중교통수단의 공급을 일부 대체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운행행태별 수송인원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년                  |
|--------------|---------------------|-----------------------|------------------------|------------------------|
| 통근·통학        | 59,108,146<br>(39%) | 94,318,189<br>(88.6%) | 122,661,369<br>(86.7%) | 229,514,232<br>(73.3%) |
| 관광 등<br>일반전세 | 93,232,436<br>(61%) | 12,086,768<br>(11.4%) | 18,774,033<br>(13.3%)  | 83,714,355<br>(26.7%)  |

출처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 : 국토교통부

넷째, 지입제를 양성화한 위·수탁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소운송의무<sup>14)</sup> 규제를 통해 지입제의 폐단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전세버스 지입제를 양성화하려는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장치가 없어 지입 전문 운송회사나 개인운행 난립 및 이에 따른 운송사업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있음.

13) “전세버스 수급조절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2025. p38.

14)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운송사업자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다섯째, 지입차주의 피해 방지와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서 개정 안처럼 화물자동차의 예와 같이 지입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개인택시의 예와 같은 개인전세버스운송사업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으므로<sup>15)</sup> 다각도의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나. 국토교통부 의견

현행법에 위반하여 음성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주에 대하여 경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안전문제,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우려됨.

전세버스는 통근·통학·관광 등 대량 여객수송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안전관리 소홀 시 대형참사·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있음.

개인사업자 난립 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곤란하며 특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전세버스 사업의 대형화·체계화를 통한 안전·서비스 관리가 바람직함.

그간 전세버스 업계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 정책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15) 제21대국회에서 개인전세버스운송사업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14795호)이 발의된 바 있음.

## 2. 주요내용에 관한 검토

### 가. 위·수탁계약제도 도입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예외 허용

개정안은 전세버스의 지입운행 형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의2(16)를 신설하여 차량 현물출자자에게 운송사업자의 경영 일부를 위탁하는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의 위·수탁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러한 위·수탁계약제도는 현행법 제12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규정과 상충되므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명의이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안 제12조의 규정은 위·수탁계약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필요한 입법조치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u>다른</u>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br>-----제12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u>다른</u> -----<br>-----<br>-----<br>-----<br>-----<br>-----<br>-----<br>-----<br>----- |
| ② 운송사업자는 <u>자기나</u>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 ② -----제12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u>자기나</u> -----                                                                                                 |

- 16) 안 제12조의2(현물출자에 따른 경영의 일부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현행                                                                                                                                                                                                                                                                                  | 개정안                                                                                                                                                                                                                                                                                   |
|-------------------------------------------------------------------------------------------------------------------------------------------------------------------------------------------------------------------------------------------------------------------------------------|---------------------------------------------------------------------------------------------------------------------------------------------------------------------------------------------------------------------------------------------------------------------------------------|
| <p>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u>자기나</u>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 ⑩ (생략)</p> | <p>-----<br/>-----<br/>-----<br/>----. -----<br/>-----<br/>-----.</p> <p>③ -----제12조의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u>자기나</u>-----<br/>-----<br/>-----<br/>-----. -----<br/>-----.</p> <p>④ ~ ⑪ (현행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나. 위·수탁계약제도 도입

개정안은 현재 화물자동차에 도입되어 있는 위·수탁계약제도를 전 세버스에 도입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상 위·수탁계약제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반영하고 있음.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개정안 조문 비교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 정 안                                     |
|------------------------|-------------------------------------------|
| 제40조(경영의 위탁)           | 제12조의2(현물출자에 따른 경영의 일부 위탁) 신설             |
| 제40조의2(위·수탁계약의 갱신 등)   | 제12조의3(위·수탁계약의 갱신 등) 신설                   |
| 제40조의3(위·수탁계약 해지 등)    | 제12조의4(위·수탁계약 해지의 제한 등) <sup>17)</sup> 신설 |
| 제40조의4(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  | 제12조의5(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 신설                  |
| 제40조의5(위·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 제12조의6(위·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신설                 |
| 제16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8항  |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11항 신설                 |

이에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차량 현물출자자(이하 “위·수탁차주”)에게 경영 일부를 위탁 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 권고하도록 하며, 시·도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현저한 불공정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12조의2 신설).

17) 안 제12조의4(위·수탁계약 해지의 제한 등)은 운송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사업자의 사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위·수탁차주의 차량이 감차조치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위·수탁계약 해지 등)의 규정을 차용하고 있으나, 조문 제목을 달리 반영하고 있음.

또한,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운송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은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사업자의 사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위·수탁차주의 차량이 감차조치 대상이 된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그 밖에,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의 양도를 허용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위·수탁계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 시 기존 위·수탁계약은 양수자·존속법인·신설법인과 위·수탁계약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2조의5·제12조의6 및 제14조제11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12조의2(현물출자에 따른 경영의 일부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p> |

| 현행 | 개정안                                                                                                                                                                                                                                                                                                                                                                                                                                                                                                                                                                                        |
|----|--------------------------------------------------------------------------------------------------------------------------------------------------------------------------------------------------------------------------------------------------------------------------------------------------------------------------------------------------------------------------------------------------------------------------------------------------------------------------------------------------------------------------------------------------------------------------------------------|
|    | <p>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⑥ 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p> <p>1. 운송계약의 형태·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p> <p>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합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p>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 설&gt;</u></p> | <p><u>익을 침해한 경우</u></p> <p>3. <u>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 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u></p> <p>4.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p> <p>5. 그 밖에 위·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제12조의3(위·수탁계약의 갱신 등) ① <u>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u></p> <p>1. <u>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가. <u>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u></p> <p>나. <u>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수</u></p> |

| 현행 | 개정안                                                                                                                                                                                                                                                                                                                                                                                                                                                                                                                                                                          |
|----|------------------------------------------------------------------------------------------------------------------------------------------------------------------------------------------------------------------------------------------------------------------------------------------------------------------------------------------------------------------------------------------------------------------------------------------------------------------------------------------------------------------------------------------------------------------------------|
|    | <p><u>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p> <p>2. <u>최초 위·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가. <u>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나. <u>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u></p> <p>다. <u>제12조의2 제3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u></p> <p>라. <u>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p> <p>② <u>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u></p>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 <p><u>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p> <p><u>③ 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제12조의4(위·수탁계약 해지의 제한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u></p> |

| 현행 | 개정안                                                                                                                                                                                                                                                                                                                                                                                                                                                                                                                                                                                                 |
|----|-----------------------------------------------------------------------------------------------------------------------------------------------------------------------------------------------------------------------------------------------------------------------------------------------------------------------------------------------------------------------------------------------------------------------------------------------------------------------------------------------------------------------------------------------------------------------------------------------------|
|    | <p><u>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u></p> <p><u>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8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수탁차주의 여객운송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u></p> <p><u>1. 제85조제1항 각 호</u></p> <p><u>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p> <p><u>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수탁차주였던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u></p>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설&gt;</u></p> | <p><u>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제12조의5(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u></p> <p><u>①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u></p> <p><u>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u></p> <p><u>2. 그 밖에 위·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p> <p><u>② 제1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u></p> <p><u>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p> <p><u>④ 제3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u></p>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설&gt;</u></p>                                     | <p>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p> <p>제12조의6(위·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 ⑩ (생략)</p> <p><u>&lt;신설&gt;</u></p> | <p>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p> <p>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p>                                                                                    |

| 현행 | 개정안                                                                                |
|----|------------------------------------------------------------------------------------|
|    | <p><u>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u></p> <p>부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개정안의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에 대해 관행화되어 있는 지입운행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예와 같은 위·수탁 계약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그런데, 안 제12조의2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하는 자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수탁계약제도의 적용대상을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sup>18)</sup>)’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버스뿐 아니라 현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속하는 노선버스, 택시 등도 지입운행을 허용하게 되므로 개정 취지에 맞게 위·수탁계약제도의 적용 범위를 전세버스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④ **운송사업자(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그리고, 안 제12조의4는 운송사업자의 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인데, 전 세버스 운송사업은 현행법상 등록업종이므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계약 해지를 간주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현실에서는 지입운행이 이미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시행 시점에서 종전 위·수탁 관계에 관한 개정안 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sup>19)</sup>.

---

19)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제도 도입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부칙 <법률 제12707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위·수탁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 및 위·수탁계약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수탁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수탁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 운송사업자의 위·수탁차주에 대한 준수사항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위·수탁차주의 차량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위·수탁차주가 다른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안 제21조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⑬ (생략)<br><u>&lt;신설&gt;</u> |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⑬ (현행과 같음)<br>⑭ <u>운송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u><br>⑮ <u>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u>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p>&lt;신설&gt;</p> | <p>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br/>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p> <p>①⑥ 운송사업자는 제12조의2제2항에<br/>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br/>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br/>「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br/>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br/>한다.</p> <p>①⑦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br/>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br/>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br/>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br/>아니 된다.</p> <p>부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br/>터 시행한다.</p> |

안 제21조에 따라 신설되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은 위·수탁계약 제도 도입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위·수탁차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여, 음성적인 지입 운행 시 보호받지 못하던 위·수탁차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제도 도입 시 필요한 입법조치로 봄.

「화물자동차법」에도 위·수탁차주의 보호를 위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sup>20)</sup>.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라.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에 현물출자 차량 포함

개정안은 현행 유가보조금, 천연가스연료보조금 지급대상에 위·수탁차주를 포함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정수급 시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대상에도 위·수탁차주를 포함하고 있음(안 제50조제5항·제6항, 안 제51조제3항, 안 제51조의2·제51조의3).

| 현행                                                                                                                                                             | 개정안                                                                                                                 |
|----------------------------------------------------------------------------------------------------------------------------------------------------------------|---------------------------------------------------------------------------------------------------------------------|
|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④ (생략)                                                                                                                                         |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br>-----<br>-----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br>-----<br>-----. |
| 1.·2. (생략)                                                                                                                                                     | 1.·2. (현행과 같음)                                                                                                      |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⑭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⑮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⑯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⑰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현행                                                                                                                                                                                                                                                                                                                                                                                                                                                                                                                                                                       | 개정안                                                                                                                                                                                                                                                                                                                                                                                                                                                                      |
|--------------------------------------------------------------------------------------------------------------------------------------------------------------------------------------------------------------------------------------------------------------------------------------------------------------------------------------------------------------------------------------------------------------------------------------------------------------------------------------------------------------------------------------------------------------------------|--------------------------------------------------------------------------------------------------------------------------------------------------------------------------------------------------------------------------------------------------------------------------------------------------------------------------------------------------------------------------------------------------------------------------------------------------------------------------|
| <p>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운송사업자에게</u>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 4. (생략)</p> <p>⑦ ~ ⑨ (생략)</p> <p>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 ② (생략)</p> <p>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u>운수사업자에게</u>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p> <p>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u>운송사업자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p> | <p>⑥ -----<br/>-----<br/>-----<u>운송사업자등</u><br/><u>에게</u>-----<br/>-----<br/>-----<br/>-----<br/>-----<br/>-----.</p> <p>1. ~ 4. (현행과 같음)</p> <p>⑦ ~ ⑨ (현행과 같음)</p> <p>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br/>-----<br/>-----<br/>-----<br/>-----<u>운수사업자(제50조제5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u>-----<br/>-----<br/>-----<br/>-----<br/>-----.</p> <p>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br/>-----<br/>-----<u>운송사</u><br/><u>업자등이</u>-----<br/>-----</p> |

| 현행                                                                                                                                                             | 개정안                                                                                                                |
|----------------------------------------------------------------------------------------------------------------------------------------------------------------|--------------------------------------------------------------------------------------------------------------------|
|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br>-----<br>-----.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u>운송사업자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br>-----<br>---- <u>운송사업자등이</u> -----<br>-----<br>-----<br>-----<br>-----<br>-----.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br>부칙<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법상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은 운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위·수탁차주의 현물출자 차량(이른바 ‘지입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에 위·수탁차주를 명시하여 포함시키려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보조금의 지급 대상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sup>21)</sup> 위·수탁차주를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되 마찬가지로 해당 업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제도적 체계에 합치됨.

다만,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위·수탁계약제도를 도입하려는 전세버스는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유가보조금 지급 및 지급정지 근거인 안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의2의 적용 대상에 위·수탁차주를 포함하더라도 전세버스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의 실익은 없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sup>22)</sup>에서는 전세버스를 현행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호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24.>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수소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제50조제7항 및 제51조의4<sup>23)</sup>에 따른 수소연료보조금 지급 및 지급정지 대상에 위·수탁차주를 포함시키는 입법이 필요함.

---

**제50조(재정 지원)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수소 연료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마. 현물출자 차량 등에 대한 압류 금지

개정안은 차량에 대한 세금·벌금 등의 미납으로 인한 압류 외에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현물출자 차량 및 지급된 유가보조금·천연가스연료보조금과 그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89조의4(압류금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5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전세버스 지입운행은 불법 행위로서 운송사업자가 저당권을 설정하여 지입차량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법적 보호받을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지입운행 형태를 양성화하여 지입차량에 대한 압류 금지를 법에 명시하는 경우 지입차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봄.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도 이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음<sup>24)</sup>.

다만, 안 제21조제15항 단서<sup>25)</sup>에서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운송사업자가 지입차량에 대해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화물자동차의 예에서와 같이 해당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또한, 전세버스는 현행법령상 수소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이므로 현물출자 차량을 수소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수소연료보조금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과태료 미납 및 저당권의 설정(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제11조제15항 단서에 따라 설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⑮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바. 과태료

개정안에서는 위·수탁계약제도 도입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94조 제2항).

| 현행                                              | 개정안                                                                                          |
|-------------------------------------------------|----------------------------------------------------------------------------------------------|
| 제94조(과태료) ① (생략)                                |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신설>                                            | 1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서명날<br>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br>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
| <신설>                                            | 1의3. 제12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위<br>·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br>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br>자                        |
| 2.·3. (생략)                                      | 2.·3. (현행과 같음)                                                                               |
| <신설>                                            | 3의2. 제21조제14항을 위반하여 여객<br>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소<br>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br>부담시킨 운송사업자                |
| <신설>                                            | 3의3. 제21조제15항을 위반하여 위·<br>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br>·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br>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운송<br>사업자 |
| <신설>                                            | 3의4. 제21조제16항을 위반하여 위·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설&gt;</u></p> <p>4. ~ 16. (생략)</p> <p>③ ~ ⑤ (생략)</p> | <p><u>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한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u></p> <p><u>3의5. 제21조제17항을 위반하여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운송사업자</u></p> <p>4. ~ 16.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안 제94조제2항에서는 위·수탁차주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 화물자동차의 예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sup>26)</sup>, 위·수탁계약제도 도입 시 신설되는 의무의

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⑭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⑮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⑯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⑰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행 확보와 동일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업종 간의 형평성 확보를 고려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봄.

다만, 「화물자동차법」에서는 과태료 외에 운송사업자의 위·수탁차주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운송사업자가 법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sup>27)</sup> 상대적 약자인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하여

-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8의2.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18의3.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5.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노후, 교통사고 등으로 대폐차가 필요한 경우 위·수탁차주의 요청을 받은 즉시 운송사업자가 대폐차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7.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을 신청하는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8.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입된 위·수탁계약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장치들을 두고 있는 바, 전세버스 위·수탁계약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제도의 안정화와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584 |

-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7.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